정치권, 낙준연대·제3지대 빅텐트에 부정적인 전망

김종인 "이낙연 만나 탈당하지 말고 당내 투쟁 권유 했었다"
탈당파 3인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 어려워" 속도 조절

이낙연·이준석 연대와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정치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의 '낙준(이낙연-이준석)연대'에 대해서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지향하는 바가 합치돼야 할텐데 개인적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용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낙준 연대'뿐 아니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가칭) 등까지 모인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각기 지금 당을 만든다고 다 나왔는데,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한꺼번에 묶기는 힘들 것"이라며 "한 정당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 봤을 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그래도 비교적 국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며 "그걸 중심으로 각자 양보를 해서 합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합쳐지기가 힘들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량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3지대가 총선에서 기호3번을 자신하는 데 대해서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제3지대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이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탈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당 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대 양당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창당 후 연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협력 방안을 놓고 온도 차가 감지됐다.

두 사람은 이날 공개된 신동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각자 추진 중인 신당을 창당한 뒤 연대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이낙연 전 대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세력화한다면 국민이 더 주목하지 않겠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저희의 고려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 거대한 잘못에 맞서라 하시면 그 물길이 합류하는 것이고, 따로 또 같이 거리를 두고 협력하라면 그에 따른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반응을 살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세력 규합을 위한 무조건적인 연대보다는 지지자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치, 이념 등의 '화학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내달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론에 대해 '이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미래대연합은 전날 제3지대 통합 목표 시한으로 '설 연휴 전'을 거론했으나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자 이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박원석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운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사견인데 저도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그때까지 '통합 빅텐트'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직함을 가진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및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총선후 국회의원 수 250명으로 감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이 구체적인 정원 축소 구상을 묻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자리, 다른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댄 예를 많이 봐 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힘 공관위원장 수도권 경선 여론조사 비율 상향 시사

"지지율 10%인 곳 90% 뜻 몰라"
'당원 50% 여론 50%' 룰 바꿀 듯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제22대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선 룰'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 아닌 데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비율이) 10%밖에 없다면 90%의 뜻을 모른다"며 "그런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국민 뜻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이 격전지다. 네 군데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데이터에 기초한 시스템 공천을 할 텐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언급은 '당원 50%, 여론조사 50%'인 기존 경선 룰을 손봐서 수도권에서는 전반적인 민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구·경북(TK) 등 당원이 많은 지역은 경선 시 당원 비율을 높일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원들 뜻 안에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며 수도권과 반대로 영남권의 경우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선거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과 손잡는 전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우리 여당은 거대 야당하고 선거를 해야 되므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지난번에 인요한 혁신위에서 기여를 해서 기존의 우리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는데 그게 큰 전환이었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들,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하면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나. 그 꿈틀거리는 게 좋은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좋은 바람을 이번 공천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공천함으로써 조직과 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전술"이라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공천을 잘해서 장수들, 즉 인력자산 배치를 잘해서 승리할 건지 오늘 전략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하반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공천을 잘하고 선거 전략도 짜고 노력해서 국민이 표를 준다고 하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며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공천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룰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尹, 조태열 외교·조태용 국정원장 등에 임명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각 배우자도 함께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기념사진 촬영 및 환담을 했다.

수여식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했다. /연합뉴스